

한·중·일 3국 협력의 전망과 과제: 일본 아베 신내각 출범을 계기로

배금찬 (국립외교원 교수)

지난 2년간 한·중·일 3국은 상호 양자 정상회의는 물론 정례화된 3국 정상회의도 개최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 왔다. 한·중·일 3국 협력의 주요 장애요인은 영토문제, 역사인식의 문제, 민족주의 문제, 중·일 간 지역패권 경쟁 등이며, 그 중 가장 가시적인 것은 영토문제이다. 한국이 한·중·일 3국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일 간 실용적 균형외교 추구, 미국과의 동맹 유지 및 강화, 한·중·일 3국 FTA 체결, 동북아 정상회의 추진, 민간 차원의 역사공동연구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3국 간 협력체제가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한 관리체제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적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적 사안이 되고 있다.

* JPI정책포럼 세미나(2013.12.13.) 발표자료

목 차

1. 한·중·일 3국 협력의 불확실성
2. 3국 협력의 주요 장애요인들
 - 가. 영토문제
 - 나. 역사인식의 문제
 - 다. 민족주의 문제
 - 라. 중·일 간 지역패권 경쟁
3. 몇 가지 고려사항들
 - 가. 중·일 간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 나. 한·미동맹 유지 및 강화
 - 다. 한·중·일 3국 FTA 체결
 - 라. 동북아 정상회의 추진
 - 마. 민간 차원의 역사공동연구 주도

1. 한·중·일 3국 협력의 불확실성

- 최근 한·중·일 3국 간 양자관계가 또 다시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
 - 한국과 일본 간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와 위안부, 강제징용 등 역사 인식의 문제가 양국 간 관계진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중국과 일본 간에도 센카쿠(중국명 조어도) 영유권을 둘러싼 영토갈등이 가열되어 양측은 한 치의 양보 없는 외교적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으며, 때로는 양국 간 군사적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음.
 - 더욱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일본의 재무장 가능성과 지역안보 역할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의구심과 우려가 커져가고 있음.
 - 최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확대·선포함에 따라, 중·일 및 한·중 간은 물론 미·중 간에도 외교적 마찰 형상이 나타나고 있음.
- 2006년 일본의 아베 총리가 고이즈미 총리에 이어 집권 후 한·일, 중·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어 한동안 양자 정상회의와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되지 못했던 적이 있었음. 그런데 아베 수상이 재집권한 현재도 이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2012년 말 일본 아베 수상이 재집권에 성공하고 지금까지 한·일, 중·일 간 양자 정상회의는 물론 정례화된 3국 정상회의도 2년간 개최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외교적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3국은 다양한 차원의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내부조율을 시도하고 있지만, 당분간 3국 정상 간의 만남은 쉽지 않아 보임.
- 3국 간 경제통합을 상징하는 한·중·일 FTA 협상도 공식 개시되기는 했으나, 당분간 진전을 이룩하기 어려운 상황임.
 - 3국은 이미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상호 입장 차이를 확인했는데, 그 간극이 상당히 크다는 점임.
 - 일본은 3국 FTA의 개방 수준을 미국이 주도하는 TPP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임.
 - 향후에도 한·중·일 3국 협력을 기대하거나 낙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ASEAN+3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협력에도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임.

2. 3국 협력의 주요 장애요인들

가. 영토문제

- 한·일, 중·일 간 협력을 가로막는 가장 가시적인 장애물은 영토문제라 할 수 있음.
 - 주지하다시피 동북아에는 한·일 간 독도문제, 중·일 간 센카쿠(조어도) 영유권 분쟁 등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영토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 한반도 통일 이후 중국과의 영토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현재 동북아에서처럼 상호불신과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 영토분쟁은 정치, 경제적 실리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가적 체면과 국민적 자존심이 걸려있는 사안이 되고 있음.
 - 이는 결코 정부 간 외교협상이나 국제법 적용을 통하여 명백하게 해결될 수 없다는 데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문제들이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가능성도 희박함. 향후 상호물리적 충돌을 피하면서 외교적 타협을 시도해 나감으로써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 할 것임.

나. 역사인식의 문제

- 영토문제와 함께 역사인식의 문제도 한·중·일 간 신뢰구축과 역내 협력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미 한국과 일본 간에는 오래 전부터 역사논쟁이 전개되어 왔음.
 - 과거 일본은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일본의 한국지배를 정당화하려는 구식민사관적 논리를 전개한 바 있으며, 이는 양국 학계의 치열한 논쟁을 촉발한 바 있음.
 -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일본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 특히 최근에는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 단체 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
-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북한도 한국과 비슷한 입장에서 일본에 대해 유사한 역사인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 이는 일차적으로 20세기 초반 군국주의 일본의 한반도 강점과 중국대륙 침략이 일본과 한국, 중국 간 역사논쟁과 마찰의 근원을 제공했기 때문임.
 - 중·일 간에는 1930년대 일본군이 저지른 남경대학살 사건이 그 대표적 사례임.

현재 동북아에서처럼 상호불신과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 영토분쟁은 정치, 경제적 실리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가적 체면과 국민적 자존심이 걸려있는 사안이 되고 있음

**역사적으로 이미
근대의 해체기에
접어든 구미와는
대조적으로 동북아
지역은 각국의
편협한 민족주의가
상호 충돌하고 있는
근대의 절정기에 있음**

- 일본과 한국, 중국 간 역사인식의 핵심 문제점은 일본이 자신들이 저지른 어두운 과거사를 일관되게 축소, 은폐, 부정하려는 점임.
- 한국과 중국 간에도 역사인식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음.
 - 2000년대 초반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하여 한국의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한국과 중국 간에도 전례 없이 치열한 역사논쟁이 전개된 바 있음.
 - 동북공정과 관련한 한·중 간 역사논쟁은 2004년 8월 양국 정부 간 외교교섭으로 일단 봉합되기는 했으나, 향후 중국의 내부적 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연될 소지를 안고 있음.
 - 중국의 한국 고대사 왜곡은 일본의 한국 근대사 왜곡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왜곡의 내용과 수준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향후 예상되는 한반도 정세변화, 즉 통일 이후 이에 따른 영토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중국의 정치적 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임.
- 동북공정과 관련된 파문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은 동북아지역에서 역사문제에 관한 한 이제까지 ‘한국+중국 대(對) 일본’이라는 기존의 대립구도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임.
 - 향후 한·중관계가 한·일관계처럼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다. 민족주의 문제

- 한·중·일 간 영토분쟁과 역사논쟁이 엄청난 인화성(引火性)의 위험을 갖는 것은 3국 모두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임. 역사적으로 이미 근대의 해체기에 접어든 구미와는 대조적으로 동북아 지역은 각국의 편협한 민족주의가 상호 충돌하고 있는 근대의 절정기에 있음.
 - 한국(북한), 중국(대만) 등 분단국들로 구성된 동북아 국가들은 아직도 근대국민국가(modern nation-state) 건설을 완결하지 못한 상태임.
 - 한·중·일 3국은 근대 초기 침략, 식민지배, 저항의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주고받았음.
 - 역설적인 것은 일본에게 침탈당했던 한국과 중국은 물론, 주변국들에 대해 가해자였던 일본조차도 태평양전쟁의 패전국으로서 나름대로의 심각한 피해자 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임.
- 최근 한·중·일 3국의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은 각국의 민족주의가 더

- 육 강력한 동원의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지만, 과거 체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사회주의는 적실성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이념적 공백을 ‘대중화주의’로 표방되고 있는 민족주의에서 찾고 있음.
 - 일본의 보수정치권도 1990년대 이후 장기간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보통국가’ 또는 ‘강한 일본 건설’ 등 사회전반에 광범위하게 표출되고 있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교묘하게 활용해 나감으로써 일본정치의 우경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음.
 - 한국의 경우도 지난 50여 년간의 고도 경제성장과 민주화의 쟁취로 식민지배, 전쟁, 가난으로부터 상처받은 국민적 자존심과 국가적 자부심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주변국들에 대한 반외세 정서와 자주에 대한 강조는 한국사회 내 또 다른 형태의 민족주의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
- 한·중·일 3국 민족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국가 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기보다는, 시민사회의 일부 또는 민간그룹이 배타적 민족주의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점임.
 - 동북아 국가들 간 민족주의 갈등이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된 정부 간 대화나 타협만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 향후 한·중·일 3국은 현실적으로는 정치, 경제적 필요성 증대에 따라 역내 협력을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인 민족주의의 파고 속에서 영토분쟁 및 역사논쟁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임.
 - 향후 3국 간 협력체제가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 편협하고 감성적인 민족주의를 넘어서서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한 관리체제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적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핵심적 사안이 되고 있음.

한·중·일 3국 민족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국가 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기보다는, 시민사회의 일부 또는 민간그룹이 배타적 민족주의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점임

라. 중·일 간 지역패권 경쟁

- 중·일 간 지역패권 경쟁은 동북아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지역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적 상호 의존 증대와 같은 경제적 조건들이 중요하지만, 역내 국가들에게 통합을 위해 필요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주도국의 리더십과 같은 정치적 조건들도 충족되어야만 하기 때문임.

냉전 종식 이후**아시아의 중심무대에****재등장한 중국과****이 지역에서 자신의****정치, 안보적 역할****증대를 도모하려는****일본 간 전략적 경쟁은****거의 필연적인 것으로****간주되고 있음**

- 문제는 중국과 일본 모두 이러한 역내 지도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임.
 - 과거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은 지역통합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경제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과거사와 관련하여 주변국들과의 신뢰구축 미비 등 정치적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음.
 - 최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은 전통적인 아시아의 패권국으로서 역내 리더십을 보이려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도 공산당 일당지배체제를 유지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지역통합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임.
- 더욱이 최근 지역패권을 놓고 벌이고 있는 양국 간 전략적 경쟁관계는 역내 협력의 진전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냉전 종식 이후 아시아의 중심무대에 재등장한 중국과 이 지역에서 자신의 정치, 안보적 역할 증대를 도모하려는 일본 간 전략적 경쟁은 거의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 이러한 양국 간 경쟁관계는 ASEAN+3 등 역내 협력이 진전되면서 보다 더 노골화되기 시작했으며, 양국은 ASEAN 등 주변 국가에 경쟁적으로 접근강화를 시도함으로써 역내협력의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고 있음.
 - 2005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개최 이후 노골화되고 있는 중·일 간 침예한 전략적 대립구도는 향후 동북아와 동아시아 협력기반 자체를 와해시킬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일·중 간 지역패권 경쟁이 한국, ASEAN 등 역내 국가들에게 일정한 자율성의 공간을 제공해주는 긍정적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경쟁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일·중 관계는 역내 협력에 최대 난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중국과 일본은 각기 단독으로 역내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없으며, 유럽 통합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와 독일처럼 양국이 상호협력하여 공동의 지도력을 발휘할 가능성 또한 희박하기 때문임.

3. 몇 가지 고려사항들**가. 중·일 간 균형적 실용외교 추구**

- 향후 한국은 동북아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 간 세력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써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적 실용외교’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임.

- 동북아의 양대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은 중국, 일본과 군사·경제적으로 대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지만, 역동적 중견세력으로서 상호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과 중국을 전략적으로 연계해 나가는 중간자 또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임.
-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적 실용외교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중국, 일본과 안정된 양자관계 유지가 필수적임.
 - 한국이 중국과 일본 간 진정한 중재자가 되려면 경사된 외교정책을 펼쳐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서도 안 될 것임.
 - 한국은 중국, 일본 모두와 안정되고 균형된 관계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동북아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담당해 나가기 위한 실용적 외교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한국은 최근 악화된 일본과의 관계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 아베 수상의 강경하고 보수적인 대내·외 정책노선이 향후 일본과 중국, 한국관계에 많은 난관을 예상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베 수상은 과거 고이즈미 수상과는 달리 일단 주변국들과 정상회의를 재개함으로써 관계 개선을 이룩하려는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한국은 여하한 경우라도 협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유연한 자세와 확고한 태세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비록 역사인식의 문제나 영토 문제와 같은 사안들이 한두 차례의 정상회의를 통하여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국 간 정상회의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 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한국은 여하한 경우라도 협상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유연한 자세와 확고한 태세를 취해 나갈 필요가 있음

나. 한·미동맹 유지 및 강화

- 향후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체제를 유지, 강화해 나가야 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불확실한 일·중 관계에 대한 하나의 보장책으로서 한미동맹 유지 및 강화는 필수적 고려사항이라 할 수 있음. 일차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역내·외 주요 강대세력들과 직접 국경을 접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전통적 세력균형론에 입각한 ‘원교

최근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의 우경화는 주변국들에 대한 불안과 확실성을 높여주고 있는바, 향후 중·일 간 경쟁과 갈등이 첨예화되어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해서라도 미국의 안정적 균형자 역할은 매우 중요한 고려점이 될 것임

- 근공(遠交近攻) 차원에서 미국과의 안보동맹관계 유지의 필수적임.
- 향후 한국은 동북아 지역협력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 간 중재자 또는 양국을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교량역할을 모색하게 될 것인바, 이 경우 미국과 확고한 동맹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한국은 중국, 일본에 대한 협상력에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임.
 - 보다 중요한 것은 역사상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강대국 간 힘의 전이 과정에서 많은 경우 대규모 폭력이 수반되는 전쟁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중국의 급부상과 일본의 우경화는 주변국들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을 높여주고 있는바, 향후 중·일 간 경쟁과 갈등이 첨예화되어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해서라도 미국의 안정적 균형자 역할은 매우 중요한 고려점이 될 것임.
 - 한·미동맹과 관련한 또 다른 주요 고려할 점은 동북아 지역협력에 미국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임. 동북아협력에 미국의 직간접적 참여는 지역협력의 성공 가능성을 한층 높여 줄 것이기 때문임.
 - 동아시아 지역의 세력 균형자로서 미국은 여전히 이 지역에 사활적인 안보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바, 미국이 자신이 배제된 동북아 지역협력을 노골적으로 반대할 경우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임.

다. 한·중·일 3국 FTA 체결

- 한·중·일 3국 협력을 촉진하고 가시화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실질적 수단은 한·중·일 3국 간 FTA를 체결하는 방안일 것임. 다행인 점은 3국이 2012년 3국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2013년 초반에 한·중·일 3국 FTA 협상을 개시할 것에 합의했다는 점임.
- 향후 한·중·일 3국 FTA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실질적으로 추동하는 핵심기제가 될 것이며, 이는 한·중·일 3국 협력에 있어서 실로 중요한 진전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임.
- 과거 10여 년간 한국과 중국은 3국 FTA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왔으나, 중국에 대해 강한 정치적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일본의 유보적 태도로 성사되지 못했음.
- 일본이 3국 FTA 협상을 전격 수용했는데 그 이유는 분명해 보임. 이는 일차적으로 기존 한·일 FTA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이미 2012년 상반기에 양자 FTA 협상을 개시했기 때문에 일본도

어떠한 형태로든 이에 대응해야만 할 필요가 있었음.

- 즉 일본은 한·중 FTA에 대응하여 향후 중국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국 FTA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한·중·일 3국 FTA 또한 문제가 다대함. 무엇보다도 최근 중·일, 한·일 간 역사 및 영토문제 때문에 과연 협상 자체가 순조롭게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임.
 - 최근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TPP 협상에 참여함에 따라, 한·중·일 3국 FTA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임.
 - 한국과 중국은 한·중 FTA에 보다 무게를 두고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임.
 -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3국 간 실무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난다 해도 최종적으로 국가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여전히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점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 FTA는 성사될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임. 역사 및 영토문제로 혼란스러운 3국 간 양자 관계의 안정성 유지와 증진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 물론 한·중·일 FTA를 체결한다 해서 곧바로 3국 간 양자관계 정상화를 보장할 수 있는 묘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황의 악화방지 및 안정화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임.
 - 향후 TPP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성사되지 못할 경우, 3국 FTA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또 다른 대안적 기제로서 부상할 수도 있기 때문임.

라. 동북아 정상회의 추진

- 한·중·일 3국 정상회의체제가 최근 수년간 구체화·제도화되어가고 있으나, 기존의 한·중·일 정상회의체제는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성을 동시에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동북아 정상회의 체제를 검토·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¹⁾
 - 향후 한·중·일 3국 정상들 간 동북아협력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고, 역내 협력과 관련한 정치, 안보, 군사, 경제, 통상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임.
 - 기존의 한·중·일 정상회의에 중국 측은 최고 실력자인 국가주석이 아닌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 3국 정상회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동북아 국가들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도 동남아 국가에서 개최되고 있는 기존의 3국 정상회의와는 차별적인 또 다른 형태의 정상

한·중·일 3국 FTA는 성사될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임. 역사 및 영토문제로 혼란스러운 3국간 양자 관계의 안정성 유지와 증진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임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 중재자가
되려면 발상의
대전환을 통하여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21세기
동북아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개방적이며 창조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

회의체제가 필요함.

- 이를 위해 한국이 먼저 제1차 동북아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되, 일본 수상과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이후 중국 또는 일본이 돌아가며 개최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회의의 의제는 한·중·일 3국 간 정치적 신뢰구축, 역내 주요 안보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략대화, 3국 경제통합, 기타 3국 간 사회, 문화적 교류를 확대, 심화하는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ASEAN+3)과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기존의 3국 정상회의와 차별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임.
- 현재 ASEAN+3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매년 열리고 있음을 감안하여, 새로운 동북아 정상회의도 매년 한 번씩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마. 민간 차원의 역사공동연구 주도

- 한국정부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과 독도 등 주변국들과의 영토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역사재단」을 출범한 바 있음. 그러나 한·중·일 3국 간 역사논쟁과 관련하여 동북아 역사재단 설치와 같이 정부주도의 이니셔티브만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고 할 수는 없음.
- 한국이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 중재자가 되려면 발상의 대전환을 통하여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21세기 동북아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개방적이며 창조적인 대응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다시 말해서 동북아 국가들 간 역사인식을 공유함으로써, 동북아의 지역적 정체성을 함양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국이 앞장서 나가야 한다는 것임.
-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한국은 기존의 한·일 간 또는 한·중 간 역사공동위원회 수준을 넘어서는 「동북아 역사공동위원회」와 같은 한·중·일 3국 간 공동의 역사연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동북아 역사공동위원회는 한·중·일 3국이 자국 중심의 편협한 민족주의사관을 뛰어넘어 동북아 전체를 공동의 역사인식 범주로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지향적 역사기술을 통하여 동북아의 지역적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 각국의 역사 교과서에 편견 없이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또한 동북아 역사공동위원회는 역사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3국의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Track II)에서 발의·조직·운영되어야

하며, 각국 정부는 이를 측면에서 후원·협력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와 같은 비정부 차원의 민간 역사공동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들을 갖고 있음.
 - 역사적으로 한국은 한 번도 주변국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패권을 추구한바 없기 때문임. 또한 상호 패권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은 한국처럼 중간자 입장에서 역사인식의 공유문제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동북아 3국 중 한국만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 할 것임.
 - 동북아 국가들 중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그 역량이 상대적으로 강력해진 한국의 시민사회는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수적 편향성을 띠고 있는 일본의 시민사회나 아직도 맹아단계에 있는 중국의 시민사회보다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임.
- 물론 이러한 구상이 현 시점에서 지극히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동북아 역사인식 공유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필요가 있음.
 - 동북아 국가들도 개방과 지역협력이라는 세계사적 큰 흐름을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한·중·일 3국도 공동체 형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한국주도의 동북아 역사공동위원회와 같은 구상이 당장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해도, 결국 언젠가는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 될 수밖에 없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역내 선도국이 갖는 이점을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야할 것임.

상호 패권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은 한국처럼 중간자 입장에서 역사인식의 공유문제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동북아 3국 중 한국만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 할 것임

주석

- 1) 기존의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매년 두 차례 개최되는데, ASEAN+3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동남아에서 개최되는 정상회의와 한중일 3국에서 번갈아 매년 개최되는 정상회의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상회의에 중국은 국가주석이 아닌 총리가 참석하고 있다.

❖ 저자 약력

■ 배금찬

現 국립외교원 교수.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한 후 미국 Claremont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함. 1989년부터 2012년까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서 아태연구부장과 연구실장을 역임함. 주요 연구 분야는 동아시아 지역협력, ASEAN 국제관계, 동남아 지역연구 등이며, 최근 연구로 “미중경쟁과 인도네시아의 중견국 외교”,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전개와 문제점”, “2013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결과분석” 등이 있음.

기획 및 감수: 진행남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오은정 (제주평화연구원 연구보조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8-652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